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에 대한 연구: 주요 일간지 기사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필*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석사과정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언론이 산재를 다루는 방식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5대 일간지의 산재 보도 행태와 뉴스 프레임을 비교 분석했다. 보수지와 진보지의 산재 보도차이도 살폈다. 연구 결과 분석대상 매체들은 산재 기사를 사회면에 주로 배치했고 보도유형은 스트레이트가 가장 많았다. 산재 보도량과 비중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보다 월등히 높았다. 취재원의 경우 한겨레와 경향은 근로자·가족, 보수지인 조선은 기업, 중앙과 동아는 정부·공공기관에 의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기업(하청)이 많았다. 외국인 산재 기사는 드물었다. 프레임을 보면 한국 언론은 설명과 책임(기업)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매체별로는 조선, 중앙, 동아, 경향이 설명프레임 비중이 높았다. 한겨레는 책임(기업)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은 미미했다.

주제어 : 산업재해, 삼성전자 백혈병, 반올림, 프레임

* susopa@naver.com

1. 서론

2016년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19살 청년 김모 군이 전동차에 치어 숨졌다. 김 군은 일을 시작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비정규직이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매년 일어났던 일이었다.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014년 독산역, 2015년에는 강남역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된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 지하철 1~4호선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탁상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만 급급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오마이뉴스, 2016). 김 군이 일했던 외주업체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와 장애 발생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수리기사가 메트로 직원과 충분히 사전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었고 2인 1조로 작업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지키기가 불가능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도 언론은 침묵했다. 김영욱(2016)은 2013년 1월 19일 성수역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당시 언론이 좀 더 탐사해 보도했다면 아마도 김 군은 지금도 살아서 19세의 꿈을 계속 꾸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백혈병 보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진 편이나 이마저도 단순 전달이나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희경과 원용진(2016)은 백혈병 사태와 관련해 언론은 삼성 편향적인 태도를 드러냈으며 삼성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그를 중계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백혈병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결과와 해결책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이 산업재해를 다루는 방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재 보도의 보다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재 보도의 양을 알아보고 이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해왔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또 산재 보도와 기업규모별, 근로자 국적별 보도 비중도 살펴본다. 보수지와 진보지의 산재 보도 행태의 차이를 알아보고 노조 기사량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치적 지향성이 산재 보도량에 영향을 주는지도 짚어본다.

지금까지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은 많았다. 하지만 산재와 관련한 보도 경향과 프레임 분석은 사실상 전무하다. 백혈병 사건만 해도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¹⁾는 있었지만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은 드물다. 특히 중소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산재보도 연구는 없었다.

국내 언론이 산재를 대하는 방식과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산재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언론의 관심과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와 작업환경 개선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 종사자들도 산재 기사에 대한 전달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김종영·김희운 (2013). 삼성백혈병의 지식정치-노동보건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 <한국사회학>, 47(2), 267-318.
추진환 (2015). <삼성백혈병 원인 규명 논란의 방법론적 고찰> 성공회대 석사학위 논문.
방희경·원용진 (2016, 5월),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를 대하는 방식: 보수 언론의 노동자와 노동 현장 지우기>. 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2. 문헌연구

1) 프레임에 관한 연구

프레임(frame)은 틀을 의미한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며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mindset),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최인철, 2016).

언론은 현실을 그대로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하기보다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프레임을 통해 전달한다. 특히 사회 현안을 다룬 보도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레임을 포함하며 이것은 뉴스 소재의 선택부터 특정 시각의 강조와 축소, 배제 등의 뉴스 구성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프레임에 대한 논의는 고프만(Goffman)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프레임이란 사건과 사건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관여를 지배하는 조직화의 원리이며, 일상생활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들을 지배하는 구조라고 했다(Goffman, 1974: 손미라, 2013 재인용). 터크만(Tuchman)은 프레임에 관한 논의를 저널리즘으로 끌어왔고, 기틀린(Gitlin, 1980)은 프레임을 패턴과 관련 지었다. 그는 뉴스프레임이란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비롯해 선택 및 강조, 배제와 관련돼 있는 지속적인 패턴이라고 전제한 뒤, 언론인이 패턴에 따라 언어 또는 영상을 만드는 게 프레임이라고 봤다.

엔트만(Entman)은 1983년 있었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의 프레임을 미국의 이란 항공기 격추 건과 비교 분석했다. 기술상의 실수 프레임과 반인륜적인 만행 프레임을 주된 프레임으로 연구했다. 갠슨(Gamson)은 뉴스 프레임에 드러난 정보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추론될 수 있는 드러나지 않는 정보의 함축적 의미, 혹은 드러난 정보와

관련된 의미와의 연관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고려하면 뉴스프레임은 사람들이 어떤 뉴스 이야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 방식이라고 정의했다(Gamson, 1992: 이현호, 2013 재인용).

이 같은 뉴스프레임 분석은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레임에 관한 기존 연구들도 크게 형식 분석과 내용 분석으로 나뉜다.

아이엔거는(Iyengar)은 뉴스프레임의 형식 분석을 위해 일화 중심적(episodic)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thematic)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일화 중심은 공적인 이슈를 구체적인 예나 특별한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개별적인 사례나 일회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며, 주제 중심은 공공이슈를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하며 일반적인 결과나 조건, 통계적 증언 및 증거 등을 강조하는 뉴스의 틀이다(임양준, 2009).

아이엔거와 사이먼(Iyengar & Simon, 1993)은 걸프전 보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언론의 뉴스보도와 여론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언론이 주제 진술식 프레임보다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사용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한석봉, 2006).

이들은 일화 중심적 프레임에 노출된 사람은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개인의 일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주제가 사소한 것으로 바뀌고 주제 진술식 프레임을 접한 이들은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정승현, 2008). 특히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상업주의가 강해지면서 주제 진술식 프레임보다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 분석을 위한 틀은 세멧코와 발켄버그(Sementko & Valkenburg, 2000)가 제시했다. 이들은 유럽 국가정상회의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

석해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human interest frame), 책임 프레임(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ame), 경제 프레임(economic consequence frame), 도덕성 프레임(morality frame)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갈등 프레임은 개인이나 집단 간 갈등에 미디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인간흥미는 사람의 감정을 주로 언급한다. 경제는 개인이나 지역,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다루며 도덕성은 윤리의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이다. 책임은 특정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이런 논의를 종합하면 언론은 일정한 프레임을 통해 세상의 일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사안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이를 축소하기도 하며 아예 보도하지 않는다.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는 것은 해당 매체가 그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국내에서도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많았다. 임양준(2009)은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촛불시위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에서 책임 귀인과 인간적 흥미, 대항, 민주적 합의, 국민건강, 정책홍보 등 8개의 프레임을 선정했다.

조은희(2012)는 동일본 대지진과 그에 따른 국내 언론의 보도를 피해수준, 오염, 위험 논란, 위험 대상확대, 복구 노력, 온정, 정치·경제 프레임 등 7개로 구분했다. 유준(2014)은 2013년 갑질 논란으로 사회이슈가 된 남양유업 관련 보도를 갈등과 인간적 흥미, 책임귀인, 경제적 결과, 공중의제, 불안·불신 프레임으로 나눴다. 이 외에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성폭력 보도, 세월호 등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프레임 분석이 있어 왔다.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에 대한 연구: 주요 일간지 기사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표 1〉 국내외 뉴스프레임 분석 유형

주제	프레임 유형
미국의 이란기 격추사건과 소련의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기술상의 실수, 반인륜 만행(Entman, 1991)
걸프전	일화적, 주제적(Iyengar & Simon, 1993)
유럽 국가정상회의	갈등, 인간적 흥미, 책임, 경제, 도덕성(Semetko & Valkenburg, 2000)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 고발사건	사건공시, 갈등적 뉴스, 진상규명 촉구, 양심고백적, 사회혼란 야기(김남일, 2008)
미국산 쇠고기와 촛불시위	책임귀인, 인간흥미, 경제적결과, 권위주의적 정책 실행, 국민 건강, 대항, 민주적합의, 정책홍보(임양준, 2009)
한반도 대운하	정책집행, 생태환경, 안전성, 경제적 결과, 정부홍보, 정치적 논리, 국민여론(임양준, 2010)
4대강 사업	권위주의, 대항, 비난, 비판, 갈등, 성장 및 효율, 환경 및 안정, 인간흥미, 책임귀인, 민주합의 및 균형(박기수, 2011)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유치경쟁 및 대립, 경제성, 백지화 및 반응, 정부대책 및 대안, 기타(남종훈, 2011)
동일본 대지진	피해수준, 오염, 위험 논란, 위험 대상확대, 복구 노력, 온정, 정치·경제(조은희, 2012)
성폭력	체벌과 감시강화, 경찰부실대처, 위기, 예방대책, 시민분노, 인간적 흥미, 범인(손미라, 2013)
삼성특검 보도	갈등, 인간흥미, 경제적, 도덕성, 책임, 설명(이현호, 2013)
남양유업 사태	갈등, 인간적 흥미, 책임귀인, 경제적 결과, 공중의 제중심, 불안불신(유준, 2014)
세월호	구조, 책임귀인, 사회문화, 정치, 휴머니티, 기타(김재용, 2016)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선행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의미하는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지금까지 산재의 특성과 주요 발생요인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왔다. 본 연구는 산재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의 특성을 다루므로 산재 예방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볼 예정이다.

산재는 과실과 안전교육 미비가 주된 요인이다. 고대석, 최순석, 그리고 정수진(1997) 등은 산업재해의 원인에 대한 자가인식 조사에서 산재의 이유로 과실이 19.3%, 안전교육 미비가 15.1%였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은 여러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정동희와 박동수(2013)는 산업재해전담부서의 존재는 산재 발생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전담부서가 존재하는 기업은 산재 발생율이 4.833이었지만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은 7.93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승과 나인강(2010)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노사관계의 협력적 풍토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종업원 1인당 산재발생율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한병(1997)은 산재 집단의 75%는 직무에 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반면 비(非)산재 집단은 48.8%만이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 산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선웅, 김규상 그리고

김태우(2008)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국내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산재율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사고부상 산재율은 시기별로 0.9%, 0.86%, 1%였고 한국인 노동자는 각각 0.75%, 0.69%, 0.66%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2.2배나 높았다. 언어적인 문제와 정보부족,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산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안전 교육 확대와 노사관계 개선, 직무스트레스 감소는 산재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중 중소기업은 예방조치에 따른 효과가 크며 외국인 산재는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태로 이는 언론 보도로 앞당길 수 있다.

3) 백혈병 등 산재 관련 보도 선행연구

백혈병 사건은 국내 언론이 산재를 집중적으로 다룬 몇 안 되는 사건 중의 하나다. 방희경과 원용진(2016)은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를 대하는 방식’에서 삼성 백혈병 사태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이고 재벌의 부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언론’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해당 연구는 KBS·MBC·SBS 방송 3사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 등 5대 일간지, 오마이뉴스·프레시안 같은 진보 인터넷 언론 등 총 23개 매체의 인터넷 기사를 분석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언론은 삼성 백혈병 사태에서 공론화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반(反) 노동 친 삼성’ 태도를 보였다. 해당 기간 중 지상파 3사는 총 475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217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537건의 백혈병 보도를 했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 언론사가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온라인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온라인 전용 기사의 존재 탓에 인터넷에 노출된 기사는 실제 방송이나 지면보도 기사량과 차이가 난다. 또 보도량을 중심으로 일부 기사 내용분석을 하는데 그친 데다 프레임 분석을 통한 매체별 보도 특성은 연구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본 연구는 주요 5대 일간지로 분석 대상은 적지만 보도량 외에 보도지면과 기사의 유형, 취재원, 프레임 등을 분석한다. 특히 백혈병을 포함해 국내 산재 기사 전반과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보도 비중과 경향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가로 보수지와 진보지의 산재 보도 방식을 파악해본다는 측면도 있다.

김세은(2016)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사 사건과 언론 보도’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권력 지향적이며 보수화됨으로써 주류 위주의 뉴스 가치를 갖대로 사회적 약자를 주요 뉴스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반복돼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연구는 산재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국내 언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지만 구체적인 수치 제시나 내용 분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산재 보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연구 경제적 이유로 주요 일간 신문의 기사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했다. 주요 일간지 분석으로도 한국 언론이 산재를 다루는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언론이 산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산재에 대한 보도 건수와 지면, 기사유형, 취재원 등을 파악한다. 이들 항목은 언론이 특정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다.

신문의 경우 특정 분야 기사를 많이 보도할수록 해당 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뜻이며, 1면 게재량이 많으면 이를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도 유형은 신문이 특정 이슈에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 수단이다. 스트레이트 이외에 해설성 기사가 많아지면 해당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안제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취재원 분류는 기사작성을 누구에게 의존했느냐를 알 수 있는 항목으로 특정 이슈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자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에 따라 언론의 산재보도가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내외국인의 차이도 알아본다. 이 네 가지 연구문제가 1-1부터 1-4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산재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한다. 내용 분석을 통해 해당 언론이 산재를 어떤 의도를 갖고 보도했으며,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임 분석은 별도의 연구문제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보수지와 진보지의 성향 차이에 따라 산재 보도와 프레임이 차이가 있는지를 산재보도 현황과 프레임 부분에 추가로 넣었다. 이들 과제가 연구문제 1-5와 2-2다.

연구문제 1. 주요 일간지는 산업재해를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는가?

연구문제 1-1. 주요 일간지의 산재 보도량 및 배치 지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주요 일간지 산재 기사의 보도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주요 일간지 산재 기사의 주 취재원은 누구인가?

연구문제 1-4. 산재 기사의 기업규모별, 근로자 국적별 보도 비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5. 보수지와 진보지는 산재 기사 보도량과 지면, 보도유형, 취재원 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 주요 일간 신문은 산재를 어떤 프레임으로 다루고 있는가?

연구문제 2-1. 5대 일간지는 산재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가?

연구문제 2-2. 보수지와 진보지가 산재 기사에 적용하는 주된 프레임은 무엇인가?

4.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의 산업재해 관련 보도를 분석했다. 분석기간을 2011년부터 2016년으로 잡은 것은 주요 산재 사건이었던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주요 매체별 산재 보도에 대한 차이와 보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산재 보도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산재 보도 전반에 대한 분석은 산재 보도의 양상이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종의 사례 분석으로 삼성전자 백혈병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포함시켜 보다 정밀하게 보고자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6월 삼성근로자의 백혈병 피해를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했는데 이는 삼성 백혈병 사태의 전환기이면서 이때부터 백혈병 문제가 보수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방희경과 원용진(2016)은 언론의 백혈병 보도와 관련해 대부분의 언론은 2014년과 2015년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기록했으며, 5대 일간지 중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기타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은 2014년 이후에 삼성 백혈병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또 2013년에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과 현대제철 사업장에서의 사고,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 같은 대형 산재 사건이 집중됐으며 2014년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잇달아 산재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석 기간은 주요 산재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매체 선정은 한국ABC협회의 2016년 유료부수 순위를 따랐다. 이들 매체는 일반적으로 '5대 일간지'로 분류된다. 이들은 보수 매체인 '조중동'과 진보매체인 '한경'으로 구분된다.

김균(2012)은 한국 신문 언론의 정파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대중적 상업 언론이 통상적으로 표출하는 정파성의 정도를 넘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정파적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이런 현상을 잘 대변해주는 표현이 '조중동' 대 '한경'이라는 용어라고 분석했다. '조중동'을 보수지로 '한경'은 진보지로 분류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살펴보면 보수지와 진보지의 산재 보도 경향 차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지면 서비스인 '아이서퍼(www.eyesurfer.com)'를 활용했다. 아이서퍼는 신문 지면을 PDF 형식의 파일로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 지면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했다. 산재 보도에

대한 판단에는 근무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재해와 사망 외에도 법원의 산재 판결, 기업과 근로자의 다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등 산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신문은 서울과 수도권에 배달되는 판을 기준으로 했으며 사진도 독립 사진기사일 경우 분석대상에 넣었다. 기사 안에 들어있는 자료 사진 개념이 아닌 사진기사만 별도로 보도되면 한 건의 보도로 처리했다. 보도사진과 방송영상은 뉴스의 프레임을 반영하여 구성되거나 독자적인 프레임을 통해 만들어지며 텍스트 뉴스를 구성하는 해석 프레임을 그대로 투영하여 비주얼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프레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장면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편집이 이루어진다(이동훈·김원용, 2012).

2) 분석내용 설정

(1) 보도량 분석

신문 기사 분석은 1차적으로 보도 건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도 건수가 많을수록 특정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처리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도 건수만으로는 해당 언론사의 입장이나 보도 방향 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재 보도량에 1면 혹은 종합면, 사회면 등 어느 면에 배치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노출 지면을 모두 확인해 함께 분석했다.

(2) 보도유형 분류

보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사의 유형을 정해야만 한다. 김성희(2007)는 기사를 유형별로 스트레이트와 피쳐, 스케치, 칼럼, 인터뷰, 가십, 단신으로 구분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성폭력 뉴스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한 손미라(2013)는 기사를 스트레이트와 해

설·기획기사, 기타로 구분했다.

산재 관련 보도 분석은 이보다 세분화했다. 스트레이트와 해설, 사설, 칼럼 외에 인터뷰와 사진 기사를 추가했다. 산재 기사의 경우 사설과 칼럼을 통해 보도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총 6가지의 기사 형식 분류를 통해 산재 보도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알아볼 예정이다.

〈표 2〉 보도 유형별 정의

구분	내용
스트레이트	역삼각형 형태의 기사로 작성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
해설	스트레이트 기사만으로 사실의 연관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때 기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 하는 기사
사설	해당 언론사의 논조를 알 수 있는 기사로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
칼럼	작성자의 의견을 게재하는 것으로 신문사 사내 칼럼과 외부 기고
사진	보도용 사진을 통해 상황 파악과 특정 견해를 갖도록 하는 기사
인터뷰	인터뷰이의 발언이 중심이 되는 기사

(3) 주 취재원 분류

매체의 보도경향을 분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사 건수와 기사량, 정보원(취재원) 등이 있다. 정보원, 즉 취재원은 해당 기사가 어떤 경로에서 작성되기 시작했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기사 작성자가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표 3〉 주 취재원 분류

취재원 분류	세부항목	비고
정부 · 공공기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경찰 · 소방서		
법원	법원, 헌법재판소	
근로자 · 가족	피해 근로자, 유가족, 직장 동료, 가대위	가대위는 삼성전자 백혈병 해결을 위한 가족대책위원회로 가족으로 분류
기업	고용주,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시민단체 · 노조	반올림, 민주노총, 노동조합 등	
국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교수, 국내외 산재 전문가, 연구원, 의사	
독립조정기관	삼성전자 중재위, SK하이닉스 검증위	조정기관은 정부나 공공기관과 관계없이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피해자 및 가족의 협의로 설립된 독립기관
기타	영화계 인사, 작가 등	

본 연구에서는 산재 관련 보도의 주 취재원을 분석했다. 취재원이 복수이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거나 기사 작성에 주된 도움을 준 쪽으로 주 취재원을 분류했다. 그 결과 정부와 공공기관, 경찰 및 소방서, 법원, 기업, 근로자 및 가족, 시민단체 · 노동조합, 국회, 전문가, 독립조정기관, 기타 등 10가지로 분류했다.

주 취재원을 분석하면 산재 기사의 깊이와 의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혹은 경찰과 소방서가 주요 취재원일 경우 단순 사실전달과 받아쓰기식 보도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법원도 산재에 대한 판결을 전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경찰과 소방서, 법원 취재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재 보도가 사실전달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업이 취재원이면 사용자(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근로자 및 가족, 시민단체가 취재원이면 산재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많이 전달한다. 주 취재원이 전문가인 경우에는 질병의 과학적 분석이나 산재의 구조적 문제를 짚을 가능성이 높다.

(4) 기업규모 및 내외국인 산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산재 보도 기업의 규모를 별도로 조사했다. 이는 국내 산재 보도가 대기업에 치우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 산재의 81%가 49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95%가량이 500인 미만 업체에서 일어난다. 기업 규모별 산재 보도건수를 실제 산재 발생업체와 비교하면 국내 산재보도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업규모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중소기업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기업전반 카테고리도 추가했다. 대기업은 100대 기업에 속하거나 그 계열사면 대기업으로 쳤다. 하청업체는 대기업 협력사로서 주로 조선과 건설업종에서 많이 나타난다. 하청업체 산재의 경우 단순히 중소기업 직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과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부각된다는 점, 대부분의 기사 제목에 대기업이 언급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구분했다. 중소기업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기본법상 분류기준²⁾을 적용했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산재 기사는 기업전반이라는 분류에 넣었다.

삼성 관련 산재 보도량도 분석했다. 삼성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지닌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거대화된 기업 ‘삼성’이 국내 경제 환경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 초법적인 권력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한다(송원근, 2005; 김남일, 2008 재인용). 이는 산재 보도에 있어서도 삼성 관련 기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완수(2012)가 지난 2012년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을 다룬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사 93건 가운데 ‘삼성옹호’는 57건으로 전체의 61.3%, ‘애플옹호’는 5.4%에 그쳤다. 중립은 33.3%였다. 이처럼 언론은 압도적으로 삼성 편을 들었다. 따라서 삼성 관련 산재 보도량을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 산재는 국적 확인이 가능한 기사만을 대상으로 했다.

(5) 노조기사와의 보도량 비교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행태를 파악하고 어떤 프레임 적용해 보도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지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진보지가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산재 보도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노조 기사량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보수지와 진보지의 산재 기사에서의 차이는 우연일 수도 있으나 산재와 분야가 같은 노조 기사량 차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신문의 정치

2)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과 해당 업종별 금액 등을 비교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업 등은 1,000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이외에도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우선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 여부를 확인해 분류했다.

적 성향이 산재 기사 보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에 산재 기사 분석 대상 기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 매체의 지면을 전수 조사했다. 노조 기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재 대상이 노조이거나 노조활동, 파업 등을 다룬 것으로 국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같은 근로자 처우문제는 제외했으나 비정규직 노조활동처럼 노조가 행동주체가 되는 것은 포함시켰다. MBC·KBS 등 언론노조 활동은 노조 기사로 세지 않았다. 기업 산재 기사와의 비교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사도 뺐다.

(6) 프레임 설정

이준웅(2001)은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뉴스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목했다. 이를 감안하면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보도하는지에 따라 독자들과 국민이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프레임 분석은 형식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프레임 분석만을 시행했다. 산재 보도의 경우 연구를 위한 사전 기사 분석 결과 기사의 상당 수가 일화 중심적이어서 형식 프레임으로 분석하면 의미 있는 결론을 얻기 힘들다. 특정 산재사건을 바탕으로 이를 위험의 외주화나 비정규직 문제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사전 기사 분석에서도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본연구에서는 기존 프레임 연구를 바탕으로 귀납적 방법을 적용, 실제 기사 분석을 통해 8개의 프레임을 추렸다. 설명과 갈등, 휴머니티, 과학적·구조적 분석, 비난, 의혹, 책임(기업), 책임(정부) 등이 그것이다. 전체 기사의 10% 분석을 통해 주된 프레임을 설정했고, 추가 분석과정에서 보완했다.

이중 설명과 갈등, 휴머니티(인간홍미), 책임 프레임은 기존 연구에

서 사용된 바 있다. 세멧코와 발켄버그(Setmetko & Valkenburg, 2000)는 유럽국가정상회의 보도를 분석하면서 갈등과 인간흥미를 이용했고, 박기수(2011)와 이현호(2013), 유준(2014) 등이 책임 프레임은 사용해 4대강 사업과 삼성특검, 남양유업 사태를 분석했다. 이중 이현호(2013)는 설명 프레임을 통해 삼성 특검사건에 대한 언론의 단순 정보전달 경향을 짚었다.

본연구에서 사용한 설명 프레임은 정부나 공공기관, 경찰, 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단순 전달하거나 산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깊이 있는 분석 없이 보도하는 것이다. 갈등은 산재 문제 해결의 주요 주체인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충돌이나 대립을 부각시키는 프레임이다. 휴머니티는 산재 과정이나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근로자나 가족의 어려움과 슬픔을 보도해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프레임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다.

책임 프레임은 산재가 일어나게 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책임 프레임의 경우 사전 연구 결과 책임의 주체가 기업이나 정부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기업과 정부로 재분류했다. 책임(개인) 프레임은 사전 연구에서 찾기 힘들어 제외했다. 산재 발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개인 과실이나 언론이 산재를 다룰 때는 개인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는 드물다. 백혈병에 걸린 삼성전자 직원을 두고 직접적인 작업장 환경과 발병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도나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기사는 있지만 직원 개인이 평소 관리를 잘못해 생긴 결과라는 보도는 없었다. 세월호 참사를 분석한 김재용(2016)도 책임 프레임을 선사와 정부, 언론 세 가지로만 세분했다.

본연구에서 추가한 프레임으로는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과 비난, 의혹 프레임이다. 과학적·구조적 분석은 질병의 경우 탐사보도를 통해 병의 원인과 산재와의 인과 관계를 파헤치거나 산재사고

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는 프레임이다. 비난은 피해 근로자의 가족, 시민단체가 발목을 잡아 산재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는 일종의 역공 프레임이다. 의혹 프레임은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축소, 왜곡하려고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프레임 분류 시에는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쪽으로 정했으며 기사의 형태와 취재원을 프레임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했다. 취재원이 경찰일 경우 설명프레임의 성격이 강한 식이다. 책임프레임은 책임의 대상이 명확히 갈리기 때문에 분류했지만 성격이 섞여 있는 기사를 더 세분화할 경우 프레임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연구 결과가 흐려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프레임을 확정했다. 이렇게 완성한 프레임은 아래와 같다.

〈표 4〉 프레임 분류

구분	내용
설명	정부나 공공기관 발표를 단순 전달
갈등	기업과 근로자 및 시민단체와의 대립을 부각
휴머니티	산재 문제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
과학적·구조적 분석	질병 발생이나 산재 발생의 구조적 원인분석
비난	피해자 가족이나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지적
의혹	산재를 은폐, 축소한다는 의심을 확산
책임(기업)	기업에 산재 책임추궁 및 보상추구
책임(정부)	정부나 공공기관에 보상 및 관련 제도 개선추구

(7)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 등 5개 신문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면 보도 기사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산업재해 관련 기사 1,192건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분석했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192건 중 10%인 119건을 무작위로 뽑아 신뢰도 검증을 했다. 무작위로 뽑히 매체별로 매년 최소 한 건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 14건, 중앙일보 11건, 동아일보 16건, 한겨레 39건, 경향신문 39건 등이다.

분석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코더 간 신뢰도를 홀스티(Holsti)³⁾ 신뢰 방식을 이용해 검증했다. 신뢰도 검증은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연구자와 종합일간지 경력 14년차 기자(코더A), 경제신문 경력 9년차 기자(코더B), 언론 홍보 25년 경력을 지닌 홍보대행사 임원(코더C)이 참가했다. 검증은 연구자와 코더A, 코더B, 코더C 간 각각 총 세 번에 걸쳐 변인별로 측정했다.

검증은 기사유형과 취재원, 프레임 분석, 기업등급 분류를 대상으로 했다. 기사유형과 취재원, 기업규모 신뢰도 측정에서 코더 모두 연구자와의 신뢰도가 0.8~0.9대로 나왔다. 코더간 신뢰도 확인은 대개 10% 정도를 추출해 코더간 일치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하며 홀스티 신뢰도 지수가 대개 0.8 이상이면 안정적인 것으로 본다(Holsti, 1969; 조용석·오창일, 2007 재인용).

다만, 프레임의 경우 코더A와 코더B는 각각 0.81, 0.89를 기록했으나 코더C와는 0.7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프레임에 대한 연구자와 코더 세명과의 신뢰도 산술평균은 0.81로 양호한 수준으로 파

3) 홀스티 신뢰도 계수=2M/(N1+N2). M은 두 사람이 일치한 건수, N1·N2는 코더 1·2가 각각 코딩한 건수

악된다. 또 네 가지 변인을 종합한 신뢰도에서는 연구자와 코더 간 신뢰도가 각각 0.86, 0.88, 0.81로 측정됐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연구결과

1) 매체별 산재 보도량 비교

(1) 총 산재 보도량

고용노동부(2016)에 따르면 2007년 2,159명에 달했던 산재 사망자 수는 2016년 1,777명까지 줄었다. 절대적인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그 비율은 여전히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이다. 이는 15명을 기록한 터키, 10명인 멕시코 다음이다. 미국(4명)과 캐나다(3명), 프랑스(2명), 독일(2명), 영국(1명)과 비교해보면 최소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산재 재해자수 9만129명 가운데 81.6%가 49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다. 500인 미만으로 잡으면 95.8%까지 올라간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제조업 근로자 가운데 재해자 수는 2만 7,011명으로 이중 외국인은 3,554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428명 가운데 41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언론이 산업재해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분석기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향신문이 산재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했고,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순이었다. 5개 매체의 보도 총 건수는 1,192건이다.

매체별로 보면 경향신문은 393건으로 5대 일간지 가운데 산재 보도를 가장 적게 한 중앙일보(109건)의 3.6배에 달했다. 경향과 한겨레(390건)는 보도량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조선일보(142건)와 중앙일보(109건), 동아일보(158건)의 기사 수는 대동소이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향과 한겨레가 산재 기사를 많이 다루고 보수 신문들이 상대적으로 기사화를 덜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향과 한겨레, 두 개 매체의 산재 기사 건수(783건)는 조선과 중앙, 동아를 합친 것(409건)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산재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산재 보도량을 보면 주요 매체, 즉 보수지를 중심으로 산재 기사 게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추정도 제기할 수는 있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건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 기사를 많이 다룰 경우 기업의 책임 문제를 거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보수지와 진보지, 두 신문 그룹 간의 기사 건수 차이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비롯해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현대제철과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의 산재, 노량진 배수지 사고 등에 대한 보도량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경영을 했던 중앙일보의 산재 보도량이 가장 적은 이유도 삼성전자 관련 산재 기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이다. 홍 전 회장은 이 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의 오빠로 두 집안은 사돈이다.

(2) 시기별 보도량

<표 5>를 보면 분석 대상인 한국 언론의 산재 기사는 2011년 134건에서 2012년 108건, 2013년 370건, 2014년 285건, 2015년 160건,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에 대한 연구: 주요 일간지 기사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표 5〉 매체별·시기별 산재 기사 분포 (단위: 건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합계
2011	13 (9.2%)	7 (6.4%)	14 (8.9%)	55 (14.1%)	45 (11.5%)	134 (11.2%)
2012	7 (4.9%)	11 (10.1%)	8 (5.1%)	38 (9.7%)	44 (11.2%)	108 (9.1%)
2013	60 (42.3%)	38 (34.9%)	49 (31.0%)	91 (23.3%)	132 (33.6%)	370 (31.0%)
2014	18 (12.7%)	25 (22.9%)	39 (24.7%)	115 (29.5%)	88 (22.4%)	285 (23.9%)
2015	25 (17.6%)	13 (11.9%)	30 (19.0%)	51 (13.1%)	41 (10.4%)	160 (13.4%)
2016	19 (13.4%)	15 (13.8%)	18 (11.4%)	40 (10.3%)	43 (10.9%)	135 (11.3%)
총계	142 (100.1%)	109 (100.0%)	158 (100.1%)	390 (100.0%)	393 (100.0%)	1,192 (99.9%)

$\chi^2=51.677$, $df=20$, $p<.01$

2016년 135건이다. 2011년과 2012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13년과 2014년 급증한 뒤 2015년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인다.

비율로 보면 2013년이 가장 높은 31.0%였고 2014년이 23.9%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2015년은 13.4%, 2011년 11.2%, 2012년 9.1% 등의 순이었다. 2013년과 2014년에 보도 건수가 많은 것은 대형 산재 탓이다. 2013년 들어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백혈병 피해 협상이 시작됐고, 2013년 3월에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대림산업,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014년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함께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가 대두됐고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는 잇단 산재가 사회 문제화했다. 삼성 백혈병 사건의 갈등이 풀리고 대기업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줄어들면서 2016년 산재 보도량은 다시 2012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매체별로 봐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다. 산재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대형 이슈를 쫓아가는 언론의 속성이 비슷하게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기별 산재 기사 보도를 보수지와 진보지로 구분해도 큰 차이는 없다. 보수지의 시기별 산재 보도는 2011년 34건(8.3%), 2012년 26건(6.4%), 2013년 147건(36.0%), 2014년 82건(20.0%), 2015년 68건(16.6%), 2016년 52건(12.7%) 등이다. 진보지는 2011년 100건(12.8%), 2012년 82건(10.5%), 2013년 223건(28.5%), 2014년 203건(25.9%), 2015년 92건(11.7%), 2016년 83건(10.6%) 등이다. 보도 순위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이슈에 따라 산재 기사를 확대하고 축소할 방향은 동일했다.

(3) 게재면별 보도량

한국 신문에서 산업재해 기사는 사회면에 가장 많이 배치됐다(<표 6>). 총 산재 기사 1,19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10건(51.2%)이 사회면에 게재됐다. 산재 기사가 주로 사회면에 들어간 것은 사건사고로서의 성격이 강한 데다 고용노동부 같은 주무 부처를 담당하는 신문사 부서가 사회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종합면 238건(20.0%), 오피니언면 153건(12.8%), 경제면 79건(6.6%), 1면 75건(6.3%), 기타 37건(3.1%) 순이다. 종합면에는 해설 및 기획기사가 많이 배치됐고 사설이나 외부기고를 통해 산재 문제를 다룬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타는 문화와 방송, 과학면 등에 산재 관련 기사가 노출된 경우다.

산업재해 기사를 신문사별로 어느 면에 배치했는지를 보면 조선일보의 전체 142건 가운데 91건이 사회면에 들어갔다. 비율로는 64.1%로 1위다. 다음으로 오피니언면(17건, 12.0%), 종합면(12건, 8.5%) 등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에 대한 연구: 주요 일간지 기사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표 6〉 매체별 산재기사 지면 배치 (단위: 건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합계
1면	9 (6.3%)	5 (4.6%)	5 (3.2%)	30 (7.7%)	26 (6.6%)	75 (6.3%)
종합	12 (8.5%)	24 (22.0%)	9 (5.7%)	94 (24.1%)	99 (25.2%)	238 (20.0%)
경제	10 (7.0%)	16 (14.7%)	30 (19.0%)	6 (1.5%)	17 (4.3%)	79 (6.6%)
사회	91 (64.1%)	51 (46.8%)	88 (55.7%)	194 (49.7%)	186 (47.3%)	610 (51.2%)
오피니언	17 (12.0%)	13 (11.9%)	19 (12.0%)	52 (13.3%)	52 (13.2%)	153 (12.8%)
기타	3 (2.1%)	0 (0.0%)	7 (4.4%)	14 (3.6%)	13 (3.3%)	37 (3.1%)
총계	142 (100.0%)	109 (100.0%)	158 (100.0%)	390 (99.9%)	393 (99.9%)	1,192 (100.0%)

$\chi^2=116.622$, $df=20$, $p<.01$

의 순으로 오피니언면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앙일보도 사회면이 51건으로 전체(109건)의 46.8%를 차지했고 종합면(24건, 22.0%), 경제면⁴⁾(16건, 14.7%)이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는 사회면(88건, 55.7%)이 절반을 넘었고, 경제면(30건, 19.0%), 오피니언면(19건, 12.0%) 순이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사회면 비중이 높았다. 우선 한겨레는 전체

4)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각각 별지로 된 경제섹션을 발행하고 있다. 경제섹션에 들어간 기사는 경제로 분류했고, 경제면이 본지 안에 배치됐을 때는 경제로 명명된 지면을 경제로 처리했다.

390건 중 194건이 사회면(49.7%)이었고 종합면(94건, 24.1%), 오피니언면(52건, 13.3%) 등이었다. 경향신문도 393건의 산재 기사 가운데 186건이 사회면(47.3%)에 배치됐고, 종합면(99건, 25.2%), 오피니언면(52건, 13.2%)에 산재 기사가 많이 들어갔다.

총 산재기사에서 1면에 처리된 기사의 비중은 한겨레가 30건(7.7%), 경향은 26건(6.6%)이다. 조선일보는 1면 보도량이 9건으로 한겨레와 경향과는 격차가 있지만 1면 처리 비율은 6.3%로 경향과 큰 차이가 없다. 산재 기사를 많이 보도하지는 않지만 기사를 게재할 때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게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 배치 산재기사가 동일하게 5건이었지만 중앙은 1면 비중이 4.6%, 동아는 3.2%에 그쳤다.

이처럼 총 산재기사 보도 건수와 1면 보도 비중을 보면 한겨레와 경향은 상대적으로 산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산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보수지와 진보지로 나눠 보면 보수지가 산재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입증된다. 보수지의 산재 기사 1면 배치 건수는 19건으로 비율로는 4.6%다. 반면 진보지는 56건에 7.2%에 달한다.

(4) 기사유형 비교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기사는 스트레이트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 총 1,192건의 산재 기사 중 66.6%에 달하는 794건이 스트레이트 기사였다. 이는 산재가 기본적으로 사건사고의 성격이 짙고, 이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설기사는 116건(9.7%), 칼럼은 90건(7.6%), 사설은 77건(6.5%), 인터뷰 63건(5.3%), 사진 52건(4.4%) 등이다.

이러한 경향은 매체별로 봐도 동일하다. 조선일보는 전체 산재 기사 가운데 68.3%가 스트레이트 기사였고 중앙일보는 67.0%, 동아일보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에 대한 연구: 주요 일간지 기사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표 7〉 매체별 산재 기사 보도 유형 (단위: 건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합계
스트레이트	97 (68.3%)	73 (67.0%)	107 (67.7%)	254 (65.1%)	263 (66.9%)	794 (66.6%)
해설	16 (11.3%)	9 (8.3%)	14 (8.9%)	42 (10.8%)	35 (8.9%)	116 (9.7%)
사설	9 (6.3%)	13 (11.9%)	3 (1.9%)	19 (4.9%)	33 (8.4%)	77 (6.5%)
칼럼	12 (8.5%)	7 (6.4%)	18 (11.4%)	32 (8.2%)	21 (5.3%)	90 (7.6%)
사진	5 (3.5%)	5 (4.6%)	8 (5.1%)	20 (5.1%)	14 (3.6%)	52 (4.4%)
인터뷰	3 (2.1%)	2 (1.8%)	8 (5.1%)	23 (5.9%)	27 (6.9%)	63 (5.3%)
총계	142 (100.0%)	109 (100.0%)	158 (100.1%)	390 (100.0%)	393 (100.0%)	1,192 (100.1%)

$\chi^2=30.607$, $df=20$, $p=0.061$

는 67.7%에 달했다. 한겨레신문도 65.1%였고 경향신문은 66.9% 수준이었다. 5대 일간지 모두 스트 비중이 비슷하게 나왔다.

결국 산재 기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점, 재발 방지책을 찾기보다 사건사고로서의 사실 전달에 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신문이 정부나 법원의 발표를 받아쓰는데 그쳤다는 추론도 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은 취재원 분석을 통해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원인 분석과 전망을 하는 해설기사는 5개 신문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건수가 미미하다. 42건으로 가장 많은 해설기사를 실은

한겨레는 해설기사 비중이 10.8%였다. 35건의 해설 기사를 게재한 경향은 비중으로는 8.9%에 불과했다. 16건의 해설 기사를 보도한 조선은 건수는 16건이었지만 비중은 11.3%로 경향을 앞섰다. 동아는 14건에 8.9%, 중앙은 9건에 8.3%였다. 사실과 칼럼 같은 오피니언 기사의 활용도는 모든 매체에 걸쳐 엇비슷했다.

산재 관련 외부 인터뷰도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23건, 27건으로 조선(3건)과 중앙(2건), 동아(8건) 등에 비해 많다. 비율은 경향이 6.9%로 가장 높고 한겨레는 5.9%, 동아 5.1%, 조선 2.1%, 중앙 1.8% 등이었다. 한겨레와 경향은 반올림 활동가 공유정옥 씨나, 삼성전자 직원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 백혈병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자 외에도 해외전문가 등에 대한 인터뷰가 많았다.

보수지와 진보지로 살펴보면 높은 스트레이트 의존도가 그대로 나타난다. 보수지의 스트레이트 산재 기사는 277건에 비중은 67.7%였다. 진보지는 517건에 비율로는 66.0%였다.

(5) 주 취재원별 보도량

일반적으로 내용 분석 시에는 기사에서 인용된 여러 명의 취재원을 추출해 이를 분석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주 취재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산재 기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취재원이 누구지를 파악해보고자 했다.

한국 언론의 산재 기사의 주 취재원은 <표 8>에서 보듯 정부와 공공기관이 241건(20.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기업으로 208건(17.4%)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174건(14.6%)였고 근로자·가족 166건(13.9%),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128건(10.7%)였다. 법원은 88건(7.4%), 국회 64건(5.4%), 기타 51건(4.3%)이다. 전문가와 독립기관은 각각 38건과 34건으로 비율로는 3.2%, 2.9%로 3% 안팎에 그쳤다.

산업재해 기사에 대한 주 취재원을 분석해보면 보도되고 있는 산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에 대한 연구: 주요 일간지 기사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표 8〉 주 취재원별 산재 기사 분류 (단위: 건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합계
정부· 공공	26 (18.3%)	30 (27.5%)	57 (36.1%)	57 (14.6%)	71 (18.1%)	241 (20.2%)
경찰· 소방	30 (21.1%)	24 (22.0%)	27 (17.1%)	36 (9.2%)	57 (14.5%)	174 (14.6%)
법원	15 (10.6%)	12 (11.0%)	8 (5.1%)	22 (5.6%)	31 (7.9%)	88 (7.4%)
근로자· 가족	7 (4.9%)	5 (4.6%)	11 (7.0%)	85 (21.8%)	58 (14.8%)	166 (13.9%)
기업	45 (31.7%)	28 (25.7%)	39 (24.7%)	40 (10.3%)	56 (14.2%)	208 (17.4%)
시민단체 등	3 (2.1%)	0 (0.0%)	4 (2.5%)	62 (15.9%)	59 (15.0%)	128 (10.7%)
전문가	7 (4.9%)	4 (3.7%)	4 (2.5%)	11 (2.8%)	12 (3.1%)	38 (3.2%)
독립기관	5 (3.5%)	3 (2.8%)	3 (1.9%)	16 (4.1%)	7 (1.8%)	34 (2.9%)
국회	2 (1.4%)	3 (2.8%)	3 (1.9%)	34 (8.7%)	22 (5.6%)	64 (5.4%)
기타	2 (1.4%)	0 (0.0%)	2 (1.3%)	27 (6.9%)	20 (5.1%)	51 (4.3%)
총계	142 (99.9%)	109 (100.1%)	158 (100.1%)	390 (99.9%)	393 (100.1%)	1,192 (100.0%)

$\chi^2=219.695$, $df=36$, $p<.01$

재 기사의 성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데, 국내 언론은 산재를 다룰 때 정부나 공공기관의 발표 내용이나 입장을 전달하는 성향이 짙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매체별로 보면 조선일보는 기업에서 기사 소스를 찾은 비중이 31.7%(4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찰·소방서(30건, 21.1%), 정부·공공기관(26건, 18.3%), 법원(15건, 10.6%) 순이었다. 중앙일보는 정부·공공기관이 30건, 27.5%로 1위였고 기업(28건, 25.7%), 경찰·소방서(24건, 22.0%), 법원(12건, 11.0%)이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는 중앙일보와 비슷한데 역시 정부·공공기관이 57건, 36.1%로 가장 많았고 기업(39건, 24.7%), 경찰·소방서(27건, 17.1%), 법원(8건, 5.1%) 등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위 3개 매체와 달랐다. 가장 많은 주 취재원은 근로자 및 가족으로 85건, 21.8%를 차지했다. 근로자 및 가족 취재원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62건으로 2번째(15.9%)였다. 정부·공공기관은 57건으로 14.6%였고, 중앙과 동아일보에서 많이 등장한 기업은 40건, 10.3%에 불과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공공기관 취재원이 71건(18.1%)으로 가장 많았지만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노조가 59건(15.0%), 근로자·가족이 58건(14.8%)으로 주요한 기사 제공처였다.

신문별로 주 취재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매체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진보 매체인 한겨레는 근로자와 가족에게서 산재 기사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했고, 보수지인 조선일보는 기업이 제1 소스 원인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중앙과 동아도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경찰 등에서 주 취재원을 삼은 사례가 많다. 이는 조선과 중앙, 동아가 산재 기사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고 발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근로자와 가족의 얘기를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눈 여겨 볼만한 부분은 한겨레와 경향은 국회의원이거나 도의원, 시 의원을 주 취재원으로 삼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의원이 주 취재원 이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와 경향의 국회 취재원 건수가 각각 34건(8.7%), 22건(5.6%)인데 반해 조선 2건(1.4%), 중앙 3건(2.8%), 동아 3건(1.9%)이라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산재 사건에 대한 과학적·구조적 분석의 바탕이 되는 전문가가 주된 취재원인 사례는 매체와 관계 없이 모두 미미했다. 조선 7건을 비롯해 중앙 4건, 동아 4건, 한겨레 11건, 경향 12건 등이었다.

보수지와 진보지로 나눠보면 보수지는 주 취재원 비중이 정부·공공기관이 113건(27.6%)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업 취재원이 많았다. 보수지가 기업을 취재원으로 한 경우는 112건(27.4%)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찰·소방이 81건(19.8%)이었고, 법원이 35건(8.6%), 근로자·가족이 23건(5.6%), 전문가 15건(3.7%) 등이었다.

반면 진보지는 근로자·가족이 143건(18.3%)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공공기관 128건(16.3%)과 시민단체·노조 121건(15.5%)도 비중이 높았다. 기업은 96건(12.3%)이었고 경찰·소방서는 93건(11.9%), 국회 56건(7.2%) 등이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보수지는 정부·공공기관, 기업에서 주로 자료를 얻으며 취재원으로서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민단체나 노조를 취재원으로 한 보도 건수는 7건(1.7%)로 상당히 낮는데 이는 매체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근로자·가족을 취재원으로 삼는 사례도 적다. 이에 반해 진보지는 근로자·가족이 143건(18.3%)에 달해 보수지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표 9〉 보수지와 진보지의 주 취재원 현황 (단위: 건수)

	보수지	진보지	합계
정부·공공	113 (27.6%)	128 (16.3%)	241 (20.2%)
경찰·소방	81 (19.8%)	93 (11.9%)	174 (14.6%)
법원	35 (8.6%)	53 (6.8%)	88 (7.4%)
근로자·가족	23 (5.6%)	143 (18.3%)	166 (13.9%)
기업	112 (27.4%)	96 (12.3%)	208 (17.4%)
시민단체·노조	7 (1.7%)	121 (15.5%)	128 (10.7%)
전문가	15 (3.7%)	23 (2.9%)	38 (3.2%)
독립기관	11 (2.7%)	23 (2.9%)	34 (2.9%)
국회	8 (2.0%)	56 (7.2%)	64 (5.4%)
기타	4 (1.0%)	47 (6.0%)	51 (4.3%)
총계	409 (100.1%)	783 (100.1%)	1,192 (100.0%)

$\chi^2=172.791$, $df=9$, $p<.01$

(6) 기업규모와 산재 대상자의 국적에 따른 보도량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 대상은 <표 10>에서 나타나듯 대기업 위주로 돼 있다. 전체 1,192건의 산재 기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4건(52.3%)이 대기업 관련 보도다. 대기업에서 일감을 받는 하청업체가 226건(19.0%)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국내 언론이 1차적으로 대기업 관련 산재 보도를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산재 재해자 수 가운데 81.6%가 49인 미만 중소기업(500인 미만 시 95.8%)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가 대기업 위주로 보도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중소기업은 179건(15.0%)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하청업체 관련 보도 건수를 더하더라도 405건에 비율로는 34.0% 수준이다. 실제 산재 발생

<표 10> 기업 규모별 보도량 (단위: 건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합계
대기업	65 (45.8%)	55 (50.5%)	77 (48.7%)	233 (59.7%)	194 (49.4%)	624 (52.3%)
하청 (대기업)	39 (27.5%)	22 (20.2%)	20 (12.7%)	61 (15.6%)	84 (21.4%)	226 (19.0%)
기업전반	16 (11.3%)	20 (18.3%)	37 (23.4%)	33 (8.5%)	45 (11.5%)	151 (12.7%)
중소기업	21 (14.8%)	11 (10.1%)	24 (15.2%)	60 (15.4%)	63 (16.0%)	179 (15.0%)
기타	1 (0.7%)	1 (0.9%)	0 (0.0%)	3 (0.8%)	7 (1.8%)	12 (1.0%)
총계	142 (100.1%)	109 (100.0%)	158 (100.0%)	390 (100.0%)	393 (100.1%)	1,192 (100.0%)

$\chi^2=48.348$, $df=16$, $p< .01$

대비 언론에서 다뤄지는 비중이 낮은 셈이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대기업 산재 기사가 65건에 비율로는 45.8%였다. 중앙과 동아는 각각 55건과 77건으로 50.5%와 48.7%였다. 대기업 산재 보도는 한겨레가 가장 많았다. 전체 390건 중 233건이 대기업 관련이었다. 비중으로는 59.7%였다. 경향은 194건에 49.4%를 기록했다.

분석 대상 신문에 대기업 산재 보도가 많은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국내 언론이 대기업 관련 산재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들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어난 하청업체의 산재를 사실상 대기업 산재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겨레신문의 2013년 5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현대제철 사고, 3년 연속 일어났다’는 식으로 원청인 대기업과 하청 산재를 동일시한다. 하청업체 사고 임을 구분해 밝히는 경우에도 한겨레 2013년 5월 11일자에 실린 ‘또 현대제철...또 하청 노동자...’ 기사처럼 원청인 대기업을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하청업체의 산재를 다룬 기사를 따져보니 조선은 39건에 비율로는 27.5%, 중앙은 22건에 20.2%였다. 두 매체 모두 대기업 하청 보도 건수가 두 번째였다. 동아는 20건, 12.7%로 다른 매체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하지만 한겨레(61건, 15.6%)와 경향(84건, 21.4%)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하청 보도 건수가 많았다. 한겨레와 경향에서도 대기업 하청업체 보도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대기업 산재 보도가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탓이다. 실제 삼성전자 백혈병 기사와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삼성정밀 화학과 삼성엔지니어링 산재, 협력업체 사고까지 포함한 삼성 관련 총 산재 기사를 살펴보면 조선이 40건으로 전체 산재 보도의 28.2%고 중앙은 24건(22.0%), 동아는 49건(31.0%), 한겨레 159건(40.8%), 경향 124건(31.6%) 등이다. 그만큼 전체 산재 기사에서 대기업, 그리고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체와 관계없이 높다.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에 대한 연구: 주요 일간지 기사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표 11〉 매체별 삼성 관련 산재 기사 (단위: 건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합계
삼성 관련	40 (28.2%)	24 (22.0%)	49 (31.0%)	159 (40.8%)	124 (31.6%)	396 (33.2%)
총 산재건수	142	109	158	390	393	1,192

대기업과 하청업체를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보도 건수는 경향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겨레 60건, 동아 24건, 조선 21건, 중앙 11건 등의 순이었다. 비율로는 경향은 전체 산재 보도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0%에 불과했고 한겨레도 15.4%였다. 하청업체를 더하더라도 중소기업 보도가 많은 한겨레조차 31.0%고 경향은 한겨레보다 높은 37.4%다. 어떤 식으로든 중소기업 산재가 실제 발생 건수에 비해 덜 다뤄지고 있다.

기업규모별 산재 보도를 보수지와 진보지로 구분해서 보면 비율 구성에 큰 차이가 없다. 보수지는 대기업 보도량이 197건(48.2%), 하청(대기업)이 81건(20.0%), 기업전반이 73건(17.8%), 중소기업 56건(13.7%), 기타 2건(0.5%) 등이다. 진보지도 대기업이 427건(54.5%), 하청기업이 145건(18.5%) 순으로 많았다. 다만 중소기업이 123건(15.7%)로 기업전반 78건(10.0%)보다 많았다. 기타는 10건(1.3%)이었다. 진보

〈표 12〉 외국인 근로자 산재 보도 현황 (단위: 건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합계
외국인 산재건수	3 (2.1%)	2 (1.8%)	2 (1.3%)	6 (1.5%)	5 (1.3%)	18 (1.5%)
총 산재건수	142	109	158	390	393	1,192

지에 중소기업의 산재를 다룬 기사가 다소 많은 것은 매체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국적 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에 대한 보도량은 극히 저조하다. 한국 언론의 외국인 산재기사 보도량은 총 18건으로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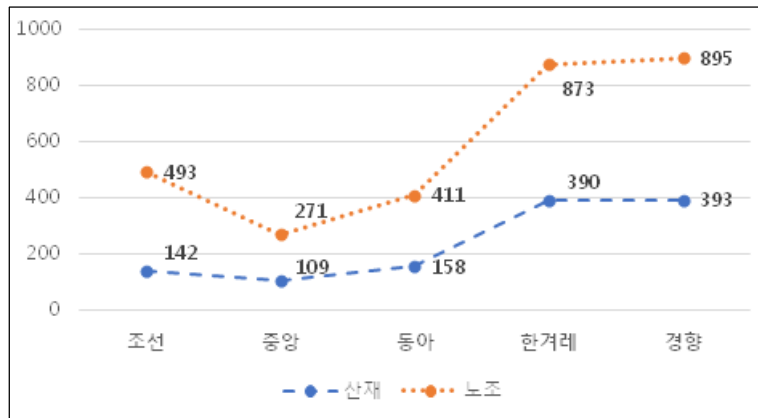
매체별로 보면 조선 3건, 중앙 2건, 동아 2건, 한겨레 6건, 경향 5건이 전부다. 비중으로 살펴보면 조선 2.1%, 중앙 1.8%, 동아 1.3%, 한겨레 1.5%, 경향 1.3%다. 이마저도 2013년에 있었던 노량진 수몰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국내 제조업 근로자 가운데 산재로 인한 외국인 재해자의 비중은 약 13.2%로 10%를 넘는다. 사망자 비율도 약 9.6%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1%대인 외국인 산재 보도는 실제 사고에 비해 비중이 작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7) 노조기사와의 보도량 비교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에 대한 산재 보도량을 분석해보면 한겨레와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산재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 결과는 각각의 신문이 가진 뉴스 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지향하는 뉴스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상정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보도량을 비교했다. 산재에 대한 관심과 노조에 대한 관심은 모두 노동자 보호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신문별로 산재와 노조기사 보도 건수는 동조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산재 기사 보도량의 차이는 매체별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에 대한 연구: 주요 일간지 기사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그림 1) 매체별 산재·노조 기사 현황 (단위: 건수)

2) 프레임 분석

(1) 매체별 프레임 비교

한국 언론의 산재 기사에는 설명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전체 1,192건의 산재 보도 중 534건(44.5%)이 설명 프레임이었다. 이는 산재 기사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책임(기업) 프레임이 422건(35.4%)였고, 책임(정부)가 75건(6.3%)으로 나타났다. 의혹은 50건(4.2%), 갈등은 45건(3.8%), 과학적·구조적 분석은 39건(3.3%)에 그쳤다. 휴머니티와 비난프레임은 각각 18건(1.5%), 9건(0.8%)이었다. 기본적으로 한국 언론은 산재를 사건사고로서 전달에 중점을 두되,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매체별로 보면 조선일보는 설명 프레임이 두드러진다. 조선은 총 142건의 산재 기사 가운데 절반인 50.7%가 설명 프레임을 적용했다. 책임(기업) 프레임은 두 번째로 많은데 33.1%다.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은 5건에 불과했고 책임(정부) 프레임도 4건에 그쳤다. 비율로

〈표 13〉 매체별 산재 보도 프레임 (단위: 건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합계
설명	72 (50.7%)	66 (60.6%)	104 (65.8%)	127 (32.6%)	165 (42.0%)	534 (44.5%)
갈등	3 (2.1%)	3 (2.8%)	9 (5.7%)	14 (3.6%)	16 (4.1%)	45 (3.8%)
휴머니티	5 (3.5%)	1 (0.9%)	3 (1.9%)	4 (1.0%)	5 (1.3%)	18 (1.5%)
과학·구조	5 (3.5%)	3 (2.8%)	5 (3.2%)	13 (3.3%)	13 (3.3%)	39 (3.3%)
비난	3 (2.1%)	1 (0.9%)	5 (3.2%)	0 (0.0%)	0 (0.0%)	9 (0.8%)
의혹	3 (2.1%)	1 (0.9%)	3 (1.9%)	19 (4.9%)	24 (6.1%)	50 (4.2%)
책임(기업)	47 (33.1%)	29 (26.6%)	24 (15.2%)	179 (45.9%)	143 (36.4%)	422 (35.4%)
책임(정부)	4 (2.8%)	5 (4.6%)	5 (3.2%)	34 (8.7%)	27 (6.9%)	75 (6.3%)
총계	142 (99.9%)	109 (100.1%)	158 (100.1%)	390 (100.0%)	393 (100.1%)	1,192 (99.8%)

$\chi^2=118.841$, $df=28$, $p<.01$

는 각각 3.5%, 2.8%다. 조선일보를 놓고 보면 설명 프레임 비중이 높고, 취재원 중 기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31.7%), 전체 기사 가운데 스트레이트가 68.3%에 달한다.

조선일보의 보도 프레임 중에는 비난 프레임도 3건(2.1%)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비난 프레임은 반올림이나 피해

자 가족을 비판하는 형태로 이들이 문제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틀을 적용한다.

중앙일보의 보도 프레임도 조선일보와 유사하다. 설명과 책임(기업) 프레임 비중이 높으며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 적용 사례는 극히 적다. 설명 프레임은 66건에 60.6%이고, 책임(기업) 프레임은 29건, 26.6%다.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은 3건으로 2.8%밖에 안 된다.

반면 비난 프레임은 1건(0.9%)에 불과하다. 조선보다 중앙의 비난 프레임 기사가 적은 이유는 먼저 중앙일보가 백혈병 사건을 매우 적게 보도(5건)한 결과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난 프레임은 결과적으로 삼성을 옹호하는 기사가 되는데,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동아일보의 프레임도 조선이나 중앙일보와 큰 틀에서 같다. 설명과 책임(기업) 프레임을 중심으로 다른 프레임 적용 비중은 낮다. 설명 프레임은 104건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고 책임(기업) 프레임은 24건, 15.2%다. 동아일보는 조선이나 중앙과 달리 갈등 프레임이 9건(5.7%)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비난 프레임이 5건(3.2%)으로 분석 대상 매체 중 가장 많았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동아일보가 삼성 백혈병 문제에서 가장 삼성 편에서 접근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겨레신문은 책임(기업)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분석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한겨레의 책임(기업) 프레임은 179건에 달해 전체의 45.9%였다. 다음으로는 설명 프레임이 127건에 32.6%였다. 한겨레에서도 설명 프레임의 비중이 작지 않지만 기업의 책임을 묻는 책임(기업) 프레임 비중이 높다는 점은 다른 매체와 차별된다. 연장선상에서 책임(정부) 프레임도 34건(8.7%)이었다. 조선의 책임(정부) 프레임은 4건, 중앙과 동아는 각각 5건이었음과 비교하면 정부에 산재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기사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기업에서 산재를 숨기거나 축소, 은폐한다는 시각을 제시하는 의혹 프레임도 19건(4.9%)에 달했다. 과학적·구조적 프레임의 경우 13건으로 분석 매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편이었으나 비중은 3.3%로 낮았다. 한겨레는 2014년 ‘또 하나의 비극 SK하이닉스’ 시리즈를 통해 심층 산재 기사의 모범을 보였다. 다른 신문에 비해 산재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한겨레조차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이 미미하다는 것은 아직 국내 언론의 산재 보도가 심층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경향신문은 설명 프레임이 165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책임(기업) 프레임도 143건으로 36.4%에 달했다.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은 한겨레와 같은 13건으로 비중으로는 3.3%다. 비난 프레임이 한 건도 없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한겨레와 경향은 피해자와 시민 단체의 취재원 비중이 높은 바, 이 같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혹 프레임은 24건(6.1%)으로 분석 대상 신문 중 가장 많았다. 경향신문의 의혹 프레임 기사 가운데는 재벌에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이 쏠리는 데 의문을 제기한 2016년 9월 20일자 사설 ‘재벌에 집중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이 포함돼 있다. 산재와 재벌을 연관시킨 글이다.

(2) 보수지·진보지의 프레임 비교

프레임을 보수지와 진보지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매체 성향에 따른 차이가 프레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표 14>는 보수지(조선, 중앙, 동아)와 진보지(한겨레, 경향)로 나눠 프레임 구성 비율을 알아본 것이다. 보수지는 설명(59.2%), 책임기업(24.4%), 갈등(3.7%) 순이나 진보지는 책임기업(41.1%), 설명(37.3%), 책임정부(7.8%) 순으로 많았다.

한국 언론의 산업재해 보도에 대한 연구: 주요 일간지 기사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표 14〉 보수지·진보지의 산재 프레임 (단위: 건수)

	보수지	진보지	합계
설명	242 (59.2%)	292 (37.3%)	534 (44.8%)
갈등	15 (3.7%)	30 (3.8%)	45 (3.8%)
휴머니티	9 (2.2%)	9 (1.1%)	18 (1.5%)
과학적·구조적	13 (3.2%)	26 (3.3%)	39 (3.3%)
비난	9 (2.2%)	0 (0.0%)	9 (0.8%)
의혹	7 (1.7%)	43 (5.5%)	50 (4.2%)
책임(기업)	100 (24.4%)	322 (41.1%)	422 (35.4%)
책임(정부)	14 (3.4%)	61 (7.8%)	75 (6.3%)
총계	409 (100.0%)	783 (99.9%)	1,192 (100.1%)

$\chi^2=86.328$, $df=7$, $p<.01$

설명 프레임이 양쪽에서 중요한 틀로 쓰이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진보지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반면 보수지에서는 이 부분이 약했다. 산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은 보수(3.2%)나 진보(3.3%)에 큰 차이가 없었다. 큰 틀에서 보면 보수지나 진보지나 산재 기사에 적용하는 프레임은

비슷하거나 한정돼 있고 과학적·구조적 프레임 기사는 그 수가 적었다. 보수지에 비난 프레임이 9건(2.2%) 있지만 진보지에는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차이다.

또 국내 언론의 전체 설명 프레임 534건 중 보수지가 45.3%(242건), 진보지는 54.7%(292건)였다. 같은 식으로 진보지의 갈등 프레임 기사 30건이 전체 갈등 프레임 기사 45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7%임을 보여준다. 보수지는 15건으로 33.3%다. 휴머니티는 9건씩으로 동물(50%)이다.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의 경우 전체 39건 중 보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3.3%, 13건이며 진보지는 66.7%, 26건이다. 비난 프레임은 보수지에만 9건(100%) 존재하며, 의혹 프레임은 전체 50건 중 보수지가 7건(14.0%), 진보지가 43건(86.0%) 있음을 보여준다. 책임(기업) 프레임은 총 422건 가운데 100건이 있는 보수지와 322건인 진보지의 비중이 각각 23.7%와 76.3%임을, 책임(정부) 프레임은 총 75건 중 보수지는 14건(18.7%), 진보지는 61건(81.3%)임을 뜻한다.

6. 결 론

1) 분석결과

분석기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산재 관련 기사는 총 1,192건이었다. 매체별로는 경향(393건), 한겨레(390건), 동아(158건), 조선(142건), 중앙(109건) 등이다. ‘조중동’으로 분류되는 보수지의 산재 기사 보도량은 진보지인 한겨레, 경향에 비해 크게 적었다.

계재면은 5개 매체 모두 사회면 보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해당 매체가 산재 기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1

면 배치량은 한겨레가 30건, 7.7%였고 경향은 26건 6.6%였다. 조선은 9건 6.3%, 중앙과 동아는 5건에 각각 4.6%, 3.2%로 비중이 미미했다. 산재 기사 보도 유형은 매체와 관계없이 스트레이트 기사가 압도적이었다.

한국 언론의 산재 기사 주 취재원은 정부·공공기관이 241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이 208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신문별 주 취재원은 차이가 있었다. 조선은 주 취재원으로 기업(45건, 31.7%)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중앙과 동아는 정부·공공기관이 주 취재원이었는데 각각 27.5%(30건)와 36.1%(57건)이었다.

반면 한겨레는 근로자 및 가족의 주 취재원 비중이 21.8%(85건)로 가장 많았다. 주 취재원을 고르는 방식을 보면 한겨레와 조선, 중앙, 동아는 대척점에 서 있다. 경향은 정부·공공기관(71건, 18.1%)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59건, 15.0%), 근로자·가족(58건, 14.8%)도 주요 취재원이었다. 이 같은 매체별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산재 기사에 있어 보수지와 진보지간 취재원 선택방식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관련 산재 보도가 가장 많았다. 우선 한국 언론의 총 산재 보도 1,192건의 절반이 넘는 624건(52.3%)이 대기업 관련 보도였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 언론의 산재 보도는 매체와 관계없이 극히 적었다. 총 18건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1.5%다.

한국 언론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한 프레임은 설명과 책임(기업) 프레임이다. 전체 1,192건의 산재 기사 가운데 534건(44.5%)이 설명 프레임이다. 조선일보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72건, 50.7%가 설명 프레임이다. 책임(기업)은 33.1%로,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은 5건에 3.5%밖에 안 된다. 중앙일보는 설명 프레임(66건, 60.6%)이 가장 많은 가운데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은 3건, 2.8%에 그쳤다. 설명 프레임(104건, 65.8%)을 전면에 내세운 동아도 과학적·구조적 분

석 프레임은 3.2% 수준이다. 한겨레는 이들 3개 매체와 상황이 다른데, 책임(기업) 프레임이 179건, 45.9%로 1위다. 무엇보다 기업과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보도가 많았다는 뜻이다. 경향은 설명 프레임(165건, 42.0%)과 책임(기업) 프레임(143건, 36.4%) 위주로 기사를 내보냈다. 다만 한겨레와 경향도 과학적·구조적 분석 프레임을 적용한 기사는 각각 13건에 3.3%로 미미했다. 특이할 만한 부분은 비난 프레임이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긴 하나 비난 프레임은 조선일보에서 3건(2.1%), 중앙에서 1건(0.9%), 동아에서 5건(3.2%) 발견된다. 한겨레와 경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보수지와 진보지로 구별해 산재 기사에 적용한 프레임을 살펴보면 보수지는 설명(242건, 59.2%), 책임기업(100건, 24.4%), 갈등(15건, 3.7%) 순이었으나, 진보지는 책임기업(322건, 41.1%), 설명(292건, 37.3%), 책임정부(61건, 7.8%) 등이었다. 과학적·구조적 프레임은 양쪽 다 미미했다. 산재에 관한 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분석 보도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표 15〉 주요 연구결과 (단위: 건)

내용(총보도량, 1·2순위 프레임)	
조선	142, 설명(72)·책임기업(47)
중앙	109, 설명(66)·책임기업(29)
동아	158, 설명(104)·책임기업(24)
한겨레	390, 책임기업(179)·설명(127)
경향	393, 설명(165)·책임기업(143)
보수지·진보지	보수 409·진보 783, 보수지 설명(242)·책임기업(100), 진보지 책임기업(322)·설명(292)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왜 국내 언론에서 산재 기사가 덜 다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은 정작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산재 기사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기자들과 간부급 기자(데스크)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산재 기사가 외면 받는 이유를 밝혀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산재 기사가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대상이 주요 신문 5개 매체에 그쳤다는 한계도 있다. 방송과 경제지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외국인 산재 기사 건수에 관해서는 기사 안에서 분류가 가능한 건만 대상으로 했기에 실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산재 기사도 정확한 기업규모와 매출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다. 또 산재 기사 총량을 분석하면서 함께 연구한 노동조합 기사량도 어디까지를 노조 기사로 보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 노조와 비정규직 처우 같은 건을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노조 기사를 계산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보도 경향을 보여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3)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언론의 산재 보도 경향과 보도량, 프레임을 분석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산재 보도에 대한 연구가 빈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관련 연구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언론은 특정 측면을 부각하고 다른 측면은 배제한다. 이를 경험한 독자나 시민들은 뉴스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의

견이 달라진다. 본 연구 결과 매체별, 그리고 보수지나 진보지나에 따라 산재 기사 프레임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지는 산재 사건의 발생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 프레임을 많이 썼고 진보지인 한겨레와 경향은 기업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프레임을 주로 썼다. 특히 보수지는 삼성 백혈병 사건에 있어 비난프레임을 통해 피해자 가족이나 시민단체를 비판함으로써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음을 알리려고 했다. 이는 언론이 산재를 다루는데 있어 프레임링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진보지(2개 매체)와 보수지(3개 매체)의 산재 기사가 분석기간 동안 총 783건과 409건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산재 보도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양승목(1997)은 현실이 미디어를 통해 자명하고 총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구성되고 개인적 수준에서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인식되는데, 이 같은 구성주의 관점이 언론학의 주요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기존 프레임 이론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4) 실무적 시사점

언론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민웅 씨의 아내 정애정 씨의 사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남편이 직업병일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정 씨에게 전해줘 이를 알게 됐다. 최소한 언론이 산재 보도를 많이 다루면 다룰수록, 본인이 산재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근로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산재 보도는 지금보다 양이 늘어나야 하며 질적인 측면도 발전해야 한다. 모든 사건사고를 다 지면에 담을 수는 없지만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더 심도 있는 산재 보도가 가능하다. 인터넷은 지면과 달리 기사송출에 제한이 없다. 특히 중소기업과 외국인 산재는 예방에 따른 효과가 높고 산재보험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의 보도 관행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심층보도도 마찬가지다. 2013년 폴리처상 기획보도 부문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스의 ‘스노폴’은 디지털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냈다. 산재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건이며 피해자나 가족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인터뷰와 심층 기획도 가능하다. 정부기관을 활용한 기획보도도 시도해 볼만하다. 산재 예방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재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산재 여부를 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사고성 재해는 승인률이 90% 내외지만, 재해조사가 쉽지 않은 직업병의 경우 승인률이 50%대로 급감한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3월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를 보면 2016년 1조5,000억원의 흑자를 낸 산재보험은 2025년 흑자폭이 3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두 적자로 돌아선다. 산재보험의 흑자폭을 감안하면 50%대에 불과한 직업병 승인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언론의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5) 후속연구 제언

후속 연구에서는 폭넓고 다양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내 언론환경의 문제점과 산재 기사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는 원인을 알아보면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외의 산재 보도와의 비교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월간 '신문과 방송' 1992년 1월호를 보면 당시 미국 산업안전보건부(OSHA)로부터 180만 건에 달하는 모든 산업안전사고를 분석해 미국 내 산업재해의 전모를 밝혀낸 데이턴 데일리 뉴스 사례가 소개돼 있다. 해외와 국내의 산재 보도 현황을 알아보고 취재환경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본다면 국내 산재 보도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외에 주요 매체들이 경제권력의 눈치에 산재 보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도 짚어볼 대목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기자협회의 한국기자상을 받은 수상작 240건을 분석해보니 이중 산재 보도로 상을 받은 것은 2건(0.83%) 있었다. 2007년 상을 받은 대전일보의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 근로자 연쇄사망 보도'와 2015년 청주CBS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그들은 왜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나?'가 그것이다.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은 두 작품 모두 지방 언론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취재력과 고급 정보 수집, 취재원 접촉 측면에서 지방지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중앙 언론사는 산재와 관련해 한번도 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장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제권력에 대한 중앙 언론의 보다 큰 종속성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고대석·최순석·정수진·박준한·이현·손병철·엄상화·이채언·배기택·전진호 (1997). 산업재해의 관련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제9권 제1호, 99-108.
- 곽한병 (1997). 여가활동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권 제1호, 5-29.
- 고용노동부 (2016). 2015 산업재해현황분석.
- 김균 (2012, 5월). <‘조중동’ 담론의 형성과 한국 언론의 구조 변동>.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 김남일 (2008). 내부고발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 고발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 통권 43호.
- 김성희 (2007). <취재수첩보다 생생한 신문기사 쓰기>.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김세은 (2016).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사 사건과 언론 보도. <신문과 방송>, 2016년 7월호, 16-21.
- 김영욱 (2016). 정확·신중한 정보 제공으로 사회 안전 역량 키워야. <신문과 방송>, 2016년 7월호, 8-11.
- 김종영·김희운 (2013). 삼성백혈병의 지식정치 - 노동보건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 <한국사회학>, 47(2), 267-318.
- 김재용 (2016). <방송뉴스와 소셜 미디어의 프레임 비교연구: 세월호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 남종훈 (2011). 사회갈등 이슈에 대한 방송뉴스보도 비교 연구: 중앙과 지역의 보도 프레임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4호, 475-483.

- 박기수 (2011). 4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 등 3개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5권 4호, 5-26.
- 박용승·나인강 (2010).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풍토가 작업장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제20권 제4호, 115-132.
- 방희경·원용진 (2016, 5월).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를 대하는 방식: 보수언론의 노동자와 노동현장 지우기>. 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 손미라 (2013). <한국 신문의 성폭력 보도 기사의 특성과 프레임 분석 -1994~2012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성폭력 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승목 (1997). 언론과 여론: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 사회>, 17호, 6-40.
- 오마이뉴스. 2016. 5. 31. <19세 청년의 죽음, 스크린도어는 잘못이 없다>
- 이동훈·김원용 (2012).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211쪽).
- 이선웅·김규상·김태우 (2008). 이주노동자와 국내 한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현황 및 특성 비교. <대한산업의학회지>, 제20권 제4호, 351-361.
- 이완수 (2012). 쌍방 간 대결 프레임 89%, 삼성우호 프레임 61%. <신문과 방송>, 2012년 10월호, 6-10.
- 이준용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46권 1호, 441-482.
- 이현호 (2013). <종합지와 경제지의 대기업 보도프레임 분석=삼성특검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 임양준 (2009).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촛불시위 보도에 나타난 뉴스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6호.
- 임양준 (2010). 공공사업 관련 사회적갈등보도에 대한 뉴스프레임 분석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9호.
- 유준 (2014).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언론의 보도 태도: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동희 · 박동수 (2013). 소기업의 산업재해전담부서 조직화와 산업재해 발생율과의 관계: 조직의 안전관리풍토의 조절역할. <영상저널>, 제6권 제1호, 61-81.
- 정승현 (2008). <인터넷 언론의 보도 프레임 비교 분석-삼성특검 보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은희 (2012). 국내신문의 일본 대지진·원전사태 보도특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23권 1호, 117-143.
- 조용석 · 오창일 (2007). <제일기획 출신 교수들이 쓴 광고홍보 실무특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추진환 (2015). <삼성백혈병 원인 규명 논란의 방법론적 고찰>. 성공회대 석사학위 논문.
- 최인철 (2016).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서울: 21세기북스(23-24쪽).
- 한석봉 (2006). <황우석 교수사태 관련 한국 언론의 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매체간·매체내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수현 (2012). <한국 언론의 선거보도 스키마 변화에 관한 연구: 신문 1면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보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Entman, R. M. (1991). Symposium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Gitlin, T. (1978). Media Sociology: The Decline of Dominant Paradigm,
Theory and Society, 6(2), 205-245.
-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최초 투고일: 2017년 10월 31일

논문 수정일: 2017년 12월 0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2월 13일

**A Study on the Reporting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Korean Press
- Focusing on the Frame Analysis
of Major Daily Newspaper**

Young-Pill Ki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Master of Arts in Future Strategy Science Journalism

An industrial accident means an injury, illness, disability, or death of an employee in the workplace.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methods used when covering industrial accidents in the Korean Press. For research, the study compares the type of report and news frame utilized among five of the top mainstream daily newspapers. The study also looks into the difference of reporting industrial accidents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channel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media generally reported industrial accidents in the society section with straight news articles. Coverage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newspapers by Hankyoreh Shinmun and Kyunghyang Shinmun than Chosun Ilbo, JoongAng Ilbo, and Dong-a Ilbo. In terms of sources, family and workers were highlighted by Hankyoreh and Kyunghyang, and Chosun spotlighted corporations, as JoongAng and Dong-a published articles based on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Coverage was collectively greater on larger corporations including subcontractors and minimal for any domestic incidents involving foreigners. In the frame analysis, industrial accidents were most frequently framed with explanation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Chosun, JoongAng, Dong-a, and Kyunghyang utilized explanation while Hankyoreh leveraged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the science and infrastructure, the coverage was minimal.

Key words : Industrial accident, Samsung Electronics leukemia, Ban-Ol-Lim, frame